■ 광주 100회 촛불집회 　　숫자로 본 '촛불'과 의미

시민 20만명 참가…'폭력' 없었다

양초 13만개, 종이컵 16만개, 성금 1억원 육박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광주 금남로 거리를 밝힌 촛불집회가 17일 100회를 맞았다. 그동안 20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공식적으로 사용된 초만 13만여개, 모금액은 1억원에 육박한다.

광주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17일 밤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100회 기념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누가 주도하고, 얼마나 참가했나=광주에서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은 지난 5월10일. 서울 촛불집회에 자극을 받은 '정책반대 시민연대' 광주·전남지부 네티즌들이 금남로에서 첫 집회를 개최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에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가 집회를 주도했다.

하루 평균 참여인원은 2천여명, 최대 집회인원은 6·10항쟁 21주년이었던 6월10일 3만명(주최측 5만명, 경찰 추산 1만8천명)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6월 중반 이후 서울 촛불집회를 이끄는 국민대책회의가 정권퇴진 등 투쟁의제를 대폭 확대하고, 집회가 장기화됨에 따라 참가자가 수십명 단위로 급격히 줄었다.

◇자발적 성금 1억원=그동안 촛불집회에 사용된 양초와 종이컵은 주최측 집계 결과 각각 12만7천여개와 16만여개. 양초와 종이컵 구매비용으로만 2천111만원이 쓰였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양초와 종이컵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촛불집회 1회 개최 비용은 대략 100만~150만원으로, 자발적 성금모금으로 충당했다. 지난 16일까지 모인 돈은 9천200여만원. 이중 시민들 모금액은 3천200만원이었고, 시국회의 참가단체 후원금은 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6월10일 저녁에만 800여만원이 걷혔다. 또 촛불집회 동안 자원봉사자와 행사진행요원에게 제공된 김밥은 51일간 1천415줄로 223만원에 달했다고 비상시국회의 측은 설명했다.

◇촛불무대에 오른 사람들은=미국산 쇠고기 반대와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등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꼬집는 '자유발언' 참여자 수는 하루 평균 11명, 그동안 1천100명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자유발언' 시간은 평균 3분, 모두 3천300분이 소요됐다. 자유발언자 중 가장 최연소는 5살, 최고령은 7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광주 촛불의 특징과 향후 일정은=광주 촛불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집회' 기조가 100일동안 지속됐다는 것이다. 수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격렬한 거리시위로 번진 서울과는 달리 모두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경우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먹물이 담긴 물총을 경찰을 향해 쏘도록 초등학생들에게 지시한 전 한총련 의장 김모(30)씨 단 한 명. 집회 도중에는 큰 마찰도 없었다.

앞으로 광주 촛불은 주말과 특정일에만 열린 것으로 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측은 "의제와 시기에 따라 주말과 특정일에만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불매운동과 지역단위 촛불집회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난 5월 1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처음 시작된 '광주 촛불집회'가 17일로 100회를 맞았다. 이날 밤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100회 기념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촛불집회서 염산 뿌린 30대 구속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에 염산이 든 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30대 무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촛불집회가 끝난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주차장에서 발생한 염산 투척 사건과 관련, 염산을 뿌리고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김모(33·무직)씨를 긴급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지난 9일 다른 시위 참가자와 함께 경찰 병력 쪽으로 염산이 든 소형 드링크병 5개를 던졌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병은 바닥에 떨어져 흰 연기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난 15일 열린 '100회 촛불 집회'에서 연행한 157명에 대해 채증 사진 등을 대조해 김모(33·무직) 씨와 박모(23·대학생) 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촛불시위 장비 대여 '운전면허 취소 부당'

촛불시위에 음향장비를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측의 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음향장비대여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7일 음향장비대여업자 김모(36)씨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촛불집회 주최측에 마이크와 확성기 등을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측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연행됐으며 경찰은 이들이 집회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직접 차량을 몰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

벌초·벌목 중 절단사고 등 잇따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성묘를 위해 벌초나 벌목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초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9시30분께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장모(54)씨가 작업 도중 넘어진 나무에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앞서 13일 오전 10시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양모(여·74)씨도 넘어진 나무에 허리를 다쳐 119구조대가 산악용 들것 등을 이용,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추석날 성묘를 위해 예초기로 벌초 작업을 하다 다치는 사고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5시께 나주시 안창동 전추마을에서 벌초를 위해 예초기를 작동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왼쪽 세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지난 11일 오후 1시50분께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에서 벌초를 하던 장모(63)씨가 예초기 날에 부상을 입는 등 예초기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예초기나 벌목 작업 관련 사고는 8월말 현재 10여건으로 추석을 앞두고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 소방본부는 "예초기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 착용, ▲예초날 안전장치(보호덮개)를 반드시 부착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 확인점검 작업 주위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한 아파트서만 7차례 절도 행각

광주남부경찰, 2명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17일 한 아파트에서만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손모(30)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창인 손씨 등은 지난 9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이모(여·38)씨의 집에 침입, 디지털 카메라와 현금 등 7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5일까지 일주일 간 같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계단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손씨 등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잠복근무를 하다 이 아파트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찾은 범인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아내 내연남자 납치 거액 요구 40대 영장

장성경찰서는 17일 아내의 내연 남자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차에 태워 납치한 뒤 거액을 요구한 혐의(강도 등)로 장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2일 순천시에서 최모(33)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고 다시 15일 최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납치해 장성군까지 데리고 다니며 협박해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내 아내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이혼 의견 일치 뒤 간통죄 성립 안돼"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룬 뒤에는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5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A 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 · 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윤찬 〈7585〉 김종두

'나무 도난' 알고보니 가족이 처분

쌍나팔

○…광주의 한 묘목 농장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도난당해 2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무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해프닝.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3)씨는 10여년 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묘목농장에 심어놓은 4천여 그루가 도난당해 1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4일 신고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나무를 심고 미국으로 간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땅 주인이 김씨의 오빠 등에게 나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가족들이 500여만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 피해자의 신고처럼 나무가 도난당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